

예·적금 금리 올려 예대마진 줄이는 은행... 차주들 '시름'

5개 은행, 예금금리 최대 0.5%p ↑
수신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도 올라
7월 코픽스 0.52%p 역대 최대폭 ↑
“주담대 등 인하로 부담완화 해야”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예·적금 금리 올리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금리조정으로 인해 차주들의 대출이자도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들이 취급한 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와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뺀 값을 말한다.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예금 금리가 낮을수록 은행들의 마진은 늘어나는 구조다.

은행들은 금리상승기를 맞아 지나친 이자수익을 쟁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예대마진 공시로 인해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시

있어 예대금리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21개 정기예금 및 26개 적금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 18개 적금과 8개 정기예금 등 총 26개 수신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정기예금 16종 및 적립식예금 11종의 금리를 최대 0.40%p 인상, 신한은행은 예·적금

38종의 금리를 최대 0.4%p 올렸고, NH농협은행은 거치식 예금 금리는 0.25%p,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0.40%p 올렸다. 지난 5월 1%도 되지 않던 수신금리가 3개월 만에 3%를 돌파한 것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예대마진 축소 경쟁이다.

다만 수신 금리가 오르면 여신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차주들의 시름은 깊

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 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7월 코픽스가 역대 최대폭인 0.52%p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예적금 금리 상승→코픽스 상승→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민들의 충격이 강하다”며 “대출금리 역시 인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0.3%p 인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금융채 5년물 지표금리)·변동금리(코픽스 지표금리) 등을 최대 0.5%p 내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인하. NH농협은행은 새희망썬대출의 금리를 0.5%p, 청년전월세대출을 0.3%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주담대 우대금리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순기능을 살리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만 올리면 차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역시 인하여 나서고 있다”며 “제도보완을 위해 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835곳... 3.1배 ↑

공정위,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분석
대방건설·지에스 등 규제회사 많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

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4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민해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 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

사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은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인사

“조 후보자, 예산·재정분야 정통
국정과제 실현 이끌어줄 적임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검증중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과 인사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현안 업무 추진과 연속성,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해 먼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한다.

또, 홍보수석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이관돼 온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더해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도 겸직하게 되며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와 함께 동반 사퇴로 공석이었던 정부1비서관에 전희경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부2비서관에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규제라든지, 안전과 환경 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제안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에는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하고,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에는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옮겨 대변인직을 누가 수행하느냐”고 묻자 “일단 부대변인 체제로 간다”며 “이재명 부대변인과 또 혼자서 하면 업무 과중 문제도 있어서 천효정 행정관이 신규로 부대변인으로 같이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개편과 관련해 ‘수석급 인사 교체 없이 실무진 교체가 책임전가라는 지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비서관급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조직진단 차원”이라며 “100일 해보니까 눈에 보이더라. 보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쇄신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주의보

>> 1면 ‘킹달러 시대’서 계속

업계 관계자들이 더현대서울의 루이비통 입점에 큰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루이비통 입점이 곧 최단기간 ‘1조클럽(한해 1조원의 매출을 올린 백화점 기업)’ 달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점 4년 11개월만에 최단기간 1조클럽 달성을 이룬 대구신세계는 2016년 개점 때 루이비통을 입점시켰고 2020년 12월 에르메스, 지난해 샤넬을 품었다. 그 결과 루이비통만 있던 2019년 7969억원, 2020년 7890억원이었던 대구신세계의 연매출은 2021년 1조52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 에루사를 품은 후 대구신세계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이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결국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명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국내의 높은 수요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명품브랜드 샤넬은 지난 7월 EU지역 상품 가격을 거의 10% 가까이 인상했다. 필립 블룬디오 샤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여름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가격 인상이나낼 수도 있다”며 북미 지역 시세와 맞추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인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해외명품 구매

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올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18건 가운데 8월에만 21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1건으로, 모두 배송·환급 지연 관련 내용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20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 62건(28.4%), 벨트·신발 29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달부터 온라인 명품 플랫폼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점검에 나섰다. 이는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한다고 지적한 데서 기인했다. /김서현 기자 seoh@